대한민국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3차 국가실행계획
중간자체평가 보고서

- 2016~2017 -

2017. 11. 17.

대한민국정부

목 차

Ⅰ. 개요 및 배경 ····· 1

Ⅱ. 국가실행계획 절차 ····· 2

Ⅲ. IRM 권고에 대한 조치 ····· 6

Ⅳ. 국가실행계획 공약의 이행 ····· 9

Ⅴ. 결론 및 향후 계획 ····· 37

참고 : 공약별 상세 현황 ····· 39

Ⅰ 개요 및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라 한다) 참여 초기부터 투명성 증진, 시민 참여 확대, 부패 방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 등 OGP의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행정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1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국가실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한민국 정부의 열정과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6년 10월 발표한 제3차 국가실행계획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시민 참여, 공직자 윤리 강화, 재정투명성 제고 등 OGP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분야에 관한 14개의 구체적인 공약을 담고 있다.

이 중간 자체평가보고서는 OGP 규정(Articles of Governance)과 OGP 정부담당관 지침서(Point of Contact Manual)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것으로, 2016년 10월~2018년 6월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 공약 사항의 적절성과 목표의 진취성, 시민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점검과 평가 등을 기술한 것이다.

II 국가실행계획 절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과정 중 협의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우선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OG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OGP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차 국가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공약에 관한 수요조사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내 OGP 활동을 주도하는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디랩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대한민국 정부의 OGP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와 향후 활동방향 정립을 위한 협의를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2016년 6월 10일 이루어진 1차 협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OGP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및 활동현황을 소개하였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열린 정부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제2차 국가실행계획 최종 자체평가보고서 및 제3차 국가실행계획 작성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축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

2016년 7월 25일에 개최된 제2차 협의에서 정부는 정부 측이 마련한 제3차 국가실행계획안을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도 공개하는 정보 및 데이터의 질적

향상, 전자정부 기술 중립성 및 웹 접근성 보장 등 7개의 공약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것, 정부 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것과 정부 내 협의 결과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공약으로 포함하였고, 나머지 공약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의견이 정리되었다.

제3차 국가실행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2016년 9월 22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제3차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3차 협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 측이 제시한 의견이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반영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보 공개 및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기 보다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약 내용과 추진 방식을 보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 내 수요 조사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 제3차 국가실행계획안이 2016년 10월 마련되었다. 제3차 국가실행계획안은 정부 내 관련 부처에 회람하여 공약의 OGP 가치에의 적합성 여부, 주요 내용과 일정계획 등에 관한 검토를 마치고 서면을 통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국가실행계획 이행 과정 중 협의

OGP 규정에 따르면, OGP 가입국은 국가실행계획 절차의 전 과정이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에 기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부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약속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OGP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2017년 4월 12일 개최되었다. 이 연석회의에는 6개 정부기관(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서울시 등)과 6개 시민사회단체(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2017년 3월 OGP 운영위원국 선출을 계기로 그간 이루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OGP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2017년 초 OGP에서 출간된 「OGP 참여와 공동창조의 기준(OGP Participation and Cocreation Standards)」의 한국어 번역본이 배포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의 OGP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제시된 14개 공약에 대하여 공약담당자들이 각 공약의 개요, 주요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국내 OGP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준비작업반을 구성, 제1차 회의를 2017년 6월 8일 개최하였다. 준비작업반 회의에서는 협력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 구성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 대표는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공약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대표는 공모를 통해 선정·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시민사회대표 공모절차가 진행되었고 8월 9일 11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이 제1기 위원단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9월 제4차 국가실행계획 평가까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OGP 활동을 주도해 나갈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은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행정개혁시민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알권리연구소, 정의연대, 한국자치행정학회이다. 협의체의 명칭은 "대한민국 OGP 포럼"으로 결정되었고, 정부(행정안전부 차관)와 시민사회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8월 24일 정부 및 시민사회대표 그리고 이번 포럼 출범을 계기로 방한한 산자이 프라드한(Sanjay Pradhan) OGP 사무국 대표(CEO) 등 OGP 사무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OGP 포럼은 출범 이후 2017년 9월 28일과 10월 19일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OGP의 역사와 운영 방식,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각 공약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포럼의 운영 방식에 대해 토의하였다.

III IRM 권고에 대한 조치

OGP는 독립보고메커니즘(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이하 "IRM"이라 한다)의 보고서를 통해 각 회원국의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2차 국가실행계획에 대한 IRM 진행보고서(Progress Report)에서, IRM 연구원은 다음 권고를 제시하였다.

5대 스마트 권고사항
1. **OGP를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 개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괄.** 국가 실천 계획의 초안 및 실행 단계에 이러한 활동을 동반해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 기업 및 기타 다양한 영역의 오픈 데이터 관계자 및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를 구성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열린 정부 핵심 과제 파악 및 포함.** 정부 3.0 공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영역을 적절히 포함할 수 있다. 1) 명예훼손법, 국가보안법, 국가 기밀 및 국정원의 향후 방향 2) 정보공개법 상 정보 공개에 대한 모호한 규정 및 3) 참여,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OGP 가치에 대응하는 전자 정부 프로그램.
3. **IRM 절차 참여.** 일반적인 OGP 지침을 준수하며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4. **더욱 진취적이고 측정 가능한 공약 수립.** 현행 정책보다 더욱 진취적인 공약을 수립한다.
5. **이해관계자 간에 배포 및 홍보할 목적으로 국문으로 국가실행계획 작성.**

위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1. OGP 이해관계자 포럼 개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괄: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비록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시민사회와의 공동창조 작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다른 회원국들의 사례와 「OGP 참여와 공동창조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2017년 8월 말 다수의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OGP포럼을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Ⅱ.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2. 대한민국 열린 정부 핵심과제 파악 및 포함: 1) 국가정보원의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OGP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하여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6월 정보공개법 시행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 확대, 정보공개위원회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시스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3) 전자정부와 관련하여서는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4-b. 대국민 서비스 포털 통합, 4-c. 대국민 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이라는 세 가지 공약을 포함시켰다.

3. IRM 절차 참여: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국가실행계획에 대한 최종 IRM 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한 광범한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 이후 공개 논평을 위한 보고서 수정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논평을 적시에 제출하였다.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대한 IRM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IRM 연구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4. 더욱 진취적이고 측정 가능한 공약 수립: 그간 이루어진 세 차례의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하여 여러 공약 사항들이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취성, 이행 수준의 측정 가능성 등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OGP포럼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식도 일치하는바,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통해서는 보다 변혁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공약의 발굴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5. 국문 국가실행계획의 배포 및 홍보: 제3차 국가실행계획의 경우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였고, 이는 OGP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아울러 2017년 4월 OGP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연석회의와 2017년 8월 대한민국 OGP 포럼 출범식에서 이를 배포하였으며, 2017년 7월 임시 개설한 대한민국 OGP 웹페이지[1]에도 게재하였다.

1) www.gov30.go.kr/ogp/ogp.jsp

IV 국가실행계획 공약의 이행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서 공공서비스 개선·공공청렴도 향상·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개선 등 6개 영역 14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이후의 추진내용을 점검한 결과, 이중 4개 공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공약도 상당 수준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1개 공약은 4-c.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이었는데, 이는 4-b. 공약에 통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4-c 관련 부분 참고)

주제	공약	추진현황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상당 수준 완료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상당 수준 완료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완료
2. 공공데이터 개방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상당 수준 완료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상당 수준 완료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완료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상당 수준 완료
3. 시민 참여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완료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상당 수준 완료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상당 수준 완료
	4-c.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	(4-b로 통합)
5. 반부패 및 공직 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상당 수준 완료
6. 재정투명성 제고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상당 수준 완료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완료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 **(추진 배경)**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정보에의 접근이나 이용 상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주요관심 대상인 사립 대학은 정보공개포털에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립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접수처를 확인하고 청구방법 등을 문의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 **(공약 내용)**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범위를 행정·공공기관에 이어 293개 사립(전문) 대학(사립대 156개, 전문대 137개)까지 확대 시행하고, 사립 대학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교육도 실시한다.
- **(추진 현황)** 2017년 8월 말 현재 전체 사립(전문) 대학 286개교 중 98%에 해당하는 280개 대학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10월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당시 사립(전문) 대학 수는 293개였으나 이후 대학 폐쇄 등으로 현재 286개교로 감소하였다. 국가실행계획 수립 당시 정보공개시스템에 연계된 사립(전문)대학교는 국민대, 포항공대, 한국과기대 3개교로 그 비율은 1%(3/293)에 불과하였지만, 이 공약 추진을 통하여 94배인 280개교로 증가하였고 비율 또한 98%로 높아졌다. 아직 정보공개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은 6개 사립대학은 고려대, 농협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이다. 사립(전문) 대학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 공약은 대학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이 6개 대학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해당 대학들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통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공약의 주요 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6.7월부터 사립(전문) 대학의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간 협의 진행
- 대학정보공개에 관한 자문 실시(2016.7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립 대학 정보공개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2016.9월, 정부대전청사)
- 2016년 12월 1일부터 전국 사립 대학 및 전문 대학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등록·연계

● **(향후 계획)** 신규 지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조사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포털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의 추가 시행을 추진한다.(2017. 5월~10월)

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

● **(추진 배경)** 원문정보공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장(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가 가능한 문서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미리 원문으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2014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에 연차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도입으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의 기간 동안 1,267만 건의 원문정보가 공개되고 다운로드 건수가 437만 건에 이르는 등 공공정보 공개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공약 내용)** 교육, 복지, 여성보육, 환경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취합·선정·공유하며, 원문정보공개에 관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전파하고 홍보한다.
- **(추진 현황)**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등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선호도 투표를 통해 반기별로 국민에게 유용한 Best 10 원문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 **(향후 계획)**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에 반기별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원문정보공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의 전파 및 홍보를 추진한다.

참고 2017년 상반기 우수 원문공개 10선 (주요 내용)

연번	기관명	주 요 내 용
1	대구광역시교육청	□ 2017 초등 협력학습 활성화 추진 계획(안) ○ 인성친화적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 수업 속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학습 분위기 정착 - 특색이 있는 수업성장 공동체 만들기, 교육과정·수업·평가 등 ○ 협력학습 활성화 방안 - 학생 배움중심, 참여중심 협력학습, 자발적인 교사수업공동체 운영, 대구원격협력학습 운영 등 ○ 교사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강화 - 협력학습지원단 운영,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대회 등
2	제주특별자치도	□ 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 “엄지 척 봉사단” 추진계획 수립 ○ 기관·단체·기업·개인 등의 “엄지 척 봉사단”을 구성하여 1일 1회 “안부전화와 말벗 해 드리기”를 통해 세대간 수눌음* 봉사활동(* 수눌음 : 제주 전통의 미풍양속으로 품앗이 협동정신) - 어르신 수요조사 및 봉사단모집·어르신 연계 : 2017. 4.~ 수시(10월) - “엄지 척 봉사단” 구성 본격 운영, 사업평가 결과 : 2017. 5. ~ 12월 등
3	한국소비자원	□ 간편식품 가격 비교조사 결과 보고 ○ 간편식품(즉석조리식품) 가격비교 조사 결과 보고서 - 간편식품 주요 품목별 판매액 및 비중, 판매점 현황 - 유통업별 최고·최저 가격, 주요 간편식품(10개) 유통업태별 가격 - 최근 4주간 품목·상품별 가격 등락률 현황 등 ※ 보도자료: 1인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별 최대 43.8%
4	강원도	□ 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2017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추진계획(안) ○ (지원대상)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16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등 ○ (지원내용)주거유지비 전세대출금이자, 월세, 광열비 등 ○ (지급기준)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 (세부계획)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등
5	산림청	□ 2017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산림청 관리 국립 치유의 숲 5개(산음·장성·청태산·양평·대관령)에서 진행하는 임산부를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종합 추진계획 - 운영기간 : 2017. 4.~ 7.(1차), 2017. 4. ~ 10.(2차) ※ 성수기, 명절기간 제외 매주 토요일 운영 예정 - 대 상 : 임신 16주 ~ 36주 임산부 - 참여인원 : 총 120회, 2,400명(20명×5개소×24회)

연번	기관명	주 요 내 용
6	법무부	□ 2017년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기본계획(안) ○ 청소년들이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할 청소년 모의재판, 우수사례 경연대회, 헌법사랑 토론대회 등 - 2017년 3월 ~ 12월 동안 9개 대회 운영 일정* * 일정 : 공고 및 접수 일자, 예선 및 심사 일정, 본선 일정 등 - 9개 대회 프로그램 소개 및 운영 목적 - 대회 별 대상, 금상, 은상 등 포상 훈격에 관한 정보
7	경기도	□ 2017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계획 ○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 교육대상 : 전 도민(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 학부모, 어르신 중점) - 교육횟수 : 연간 60회 - 운영내용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 운영방법 : 수요기관 교육신청 토대로 월별 교육계획 수립·시행 등
8	한국수자원공사	□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통합 수질관리체계구축 추진계획 ○ 상수원 수질개선시설·취수시설의 정수장 연계운영,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全과정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ICT 기반 수질관리 체계 구축, 수질정보시스템 구축, 수질예측시스템(SURIAN) 고도화, 실시간 수질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연구 및 기술개발 - 통합 수질관리 패키지 시스템 구축, 정수처리 효율예측 시뮬레이터 개발연구 등
9	서울특별시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1000, 2017년 추진계획 ○ 우수시설 확충 - 공공주택 단지내 어린이집 및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공공건축물 신·증축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일반건물 리모델링 등 : 32개소 등 ○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아동친화적 외관·실내디자인 적용, 쾌적하고 편리한 국공립 설치 - 보육교사 인력풀 규모 확대, 경력별 교육과정 도입, 신규·우수시설 원장 간 멘티-멘토 운영, 보육수준 상향평준화 등
10	중소기업진흥공단	□ 2017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안) ○ 잠재력 있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현장에 필요한 직업훈련 실시 및 新산업분야 취업연계 지원 - (사업예산) 584백만원(수탁사업 예산으로 편성운영) - (훈련과정) 스마트제조 분야에 특화(3과정) - (훈련인원) 4차 산업혁명분야 90명(과정당 30명 정원) 전문인력 - (신청대상) 청년 구직자 중 미취업 졸업자, '18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 기타 : 훈련기간('17.6.26. ~ 10.27.), 잠재력 있는 청년 구직자 선발,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등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 **(추진 배경)**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생활 밀접 정보, 대규모 예산 사업정보, 행정 감시 정보를 사전에 주기적으로 공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정보를 선정·공표함으로 인해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사전정보 공표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한 공표목록과 세부항목 묶음에 해당하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여 기관별 공표정보 건수 상향 평준화, 질적 수준 제고 등을 꾀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 이행률이 평균 49.6%로 저조한 수준에(2015.12월 기준) 머물러 있다.

- **(공약 내용)**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 이행률을 연차적으로 향상시킨다. 특히, 2015년 말 현재 49.6%에 머물러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표 이행률을 2016년 말까지 55%로 개선한다.
- **(추진 현황)** 외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 대전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대상의 사전정보공표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 사전정보공표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도입 및 적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5년 말 80% 수준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이행률은 2017년 10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1%,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87%로 향상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말에 55.0%를 달성하였다. 2017년 1월에는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을 선정하여 홍보하였다. 2017년 11월 사전정보공표가 미흡한 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향후 계획)** 앞으로 사전공개하는 정보의 양을 계속 확대하면서 정보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2 공공데이터 개방

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 **(추진 배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로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계, 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전략 위원회는 기관별 데이터베이스 현황 및 개방 계획 조사, 개방 후보 데이터에 대한 현장 실사, 온라인 평가 등을 거쳐 사회·경제적으로 개방효과가 큰 36대 분야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로 선정하여 정보 수요자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까지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정보, 상권·부동산정보 등 11개 분야의 개방을 완료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편의가 제고되고 정부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공약 내용)**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을 지속 추진하여, 식의약품 종합정보 등 22개 분야는 2016년까지 개방을, 국세, 사회보장, 판결문 등 3개 분야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학진학률, 식품방사능수치, 특허-상품 연계정보, 지식재산권 정보 등 42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개방 노력도 진행된다.

참고 2016년 22대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의 기대 효과

구분	분야명(기관)	개방 내용	기대 효과
1	**도로명주소정보** (행정자치부)	**(현황)**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매핑한 4종의 도로명주소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 **(개방)** 민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 주소 관련 데이터 2종* 추가 개방 *도로명주소안내도, 주출입구요약정보	▸ 공공, 민간의 주소전환 및 활용지원으로 국민 생활 편의 증대 ▸ 각종 도로명주소 연계 제공으로 기업의 주소구축 등 운영비용 절감
2	**지방재정정보** (행정자치부)	**(현황)**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시, 지방재정연감 등 정보 공개 **(개방)** 기존 자치단체 포함, 공기업, 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재정 운용상황 전면 개방을 위해 통합공시, 통계정보 등 68종 개방 및 API 서비스 제공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16년 초)	▸ 재정정보의 적극 활용을 통한 지자체 재정분석 및 진단에 활용 가능
3 (통합)	**음식물쓰레기정보** (환경부)	**(현황)** 111개 지자체 약 250만 세대의 RFID음식물쓰레기 배출관련 통계정보 3종 개방 **(개방)** 파일 중심의 개방에서 오픈API 서비스 개발·제공 및 배출관련 3종 개방 *배출자정보는 사용자 동의후 개방 추진	▸ 재활용정책 수립, RFID·계량기 등 관련 산업계의 시장 확대 및 지자체 환경행정 효율성 제고, 배출량 감소로 도시환경 개선 등
4 (통합)	**국가공간정보** (국토교통부)	**(현황)** 국가공간정보통합 포털을 통해 지적정보, 토지정보 등 부동산종합정보 11종 우선 개방 **(개방)** 공시지가정보, 가격정보 등 부동산종합정보 22종 추가 개방 *시범지역 품질개선('15)→전국단위 품질개선 수행	▸ 공간정보 취득에 필요한 경비 절감 및 공간정보 비즈니스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 (국토교통부)	**(현황)** 브이월드를 통해 연속지적도 등 60종의 오픈API 개방 **(개방)** 주거환경개선지구도, 토지피복분류도, 급경사붕괴위험지역도 등 15종 오픈API 추가 개방	▸ 국가공간정보를 타 분야와 융·복합 활용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
5	**부동산거래관리정보** (국토교통부)	**(현황)**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종(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매매·전월세가) 개방 **(개방)** 토지 매매 실거래가 1종 추가 개방하고 GIS 연계 검색기능 및 오픈API 기능 개발	▸ 공개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구분	분야명(기관)	개방 내용	기대 효과
6	**도시계획정보** (국토교통부)	**(현황)**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통해 도시계획현황 통계 등 9종 부분개방 * UPIS가 설치된 88개 지자체 정보만 제공 **(개방)**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4종의 도시계획정보 추가 개방 * 도시군관리계획, 기본계획,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현황통계	▸ 도시계획 전 과정에 대한 정책 투명성 확보 ▸ 도시계획 고시정보 활용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간소화
7	**해운항만물류정보** (해양수산부)	**(현황)**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정보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화물반출입정보, 화물 처리실적 등 9종 CSV 파일형태로 개방 **(개방)** 항만물류 데이터 품질개선 및 처리실적 등 개방	▸ 항만물류 관련 민간·공공 데이터의 융·복합으로 물류 서비스 분야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
8	**국가법령정보** (법제처)	**(현황)** 현행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례, 법령용어 등 전체 법령 API로 개방 **(개방)** 상위법령 목록 등 법령-자치법규 연계정보 개방, 개방형표준문서양식(ODF) 형태로 제공	▸ 부처 간 협업으로 법령, 영문법령, 법제처 해석례, 법원 판결례, 헌재 결정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한번에 검색 * 서비스 제공으로 ('14년) 200만건 → ('15년) 329만건 이상으로 증대
9	**식의약종합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식·의약품 허가정보, 식품첨가물, 약물유전정보 등 58종 개방 **(개방)** 통합식품안전정보, 의약품정보, 해외위해정보 등 9종 추가개방 및 오픈API 개발 * 통합식품안전정보 5종, 의약품정보 3종, 식품 및의료제품위해정보 1종 등 9종 개방	▸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개방으로 부가가치창출 및 생활 편익 증대 ▸ 부적합 내역 등 개방으로 부정불량 식·의약품 퇴출
10	**수출입무역통계정보** (관세청)	**(현황)** 수출입무역통계 포털을 통해 무역통계 42종 개방 중 **(개방)** 정보 수요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품목군별 수출.입 무역 통계 등 10종 추가 개방	▸ 영세 전자상거래 창업자, 기존 사업자들의 수입패턴 파악 및 수요예측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1	**국가종합전자조달정보** (조달청)	**(현황)** 조달데이터 8종의 오픈API 개방 중 * 데이터 정제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개방)** 7종의 조달데이터 추가개방 및 오픈API 서비스제공 * 입찰정보, 쇼핑몰제품정보, 업종정보 등	▸ 조달데이터 정보조회시간 단축 ▸ 조달데이터를 활용하는 80개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예상

구분	분야명(기관)	개방 내용	기대 효과
12	**산업재산권정보** (특허청)	**(현황)** 특허청 개방포털 KIPRIS^{Plus} 통해 산업재산권 관련 28종 데이터와 Open API 서비스 제공 **(개방)** 특허-상품연계분류정보, 특허·실용신안 이미지공보, 특허심판 서지정보 등 4종(약61만건) 추가 개방	▸ 특허-상품연계 분류정보 DB구축으로 검색 고도화 및 민간 서비스 창출
13	**건강진료보험심사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황)** 진료심사정보 51종, 환자정보 4종, 오픈API 9종 등 총 64종 개방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구축('15년) **(개방)** 의약품관련 3종 API서비스 추가 개발 * 의약품표준코드,의약품RFID,의약품묶음정보	▸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확대로 일자리 창출 ▸ 전문의료기관·관심질병·안심의약품 정보 등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국민편익 제고
14	**해양공간정보** (국립해양조사원)	**(현황)** 해상구역도, 어장정보도, 요트낚시정보도, 소형선 항만안내도 등 4종 해양정보 부분개방 **(개방)** 부분개방 데이터 완전개방 추진을 통해 해양주제도 속성정보 개방 확대	▸ 해양GIS분야 데이터 가치는 약 1,600억원, 생산유발액 약 2,205억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459억 원 예상
15	**국민연금정보** (국민연금공단)	**(현황)** 급여 연금내역, 수급현황 정보, 장애연금심사 현황 등 17종 개방 * 데이터정제 및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개방)** 장애연금심사현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현황, 장애인지원현황 정보 등 3종 오픈API 확대 추진	▸ 국민연금 가입자 구조, 노후준비, 연금수령액 추이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수립에 활용 ▸ 고객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및 상담 자료로 활용 가능
16	**노동보험정보** (근로복지공단)	**(현황)** 근로자·사업자의 산재·고용보험 및 임금채권 보장사업 등의 보험 및 통계정보 22종 개방 **(개방)** 고용산재 보험가입사업장 및 행정심판 사례정보 등 2종 추가 개방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외안전망 구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
17	**고용보험정보** (한국고용정보원)	**(현황)** 고용보험 사업장, 피보험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 5개 분야 18종 통계 개방 **(개방)** 고용보험 관련 원천데이터 4종 추가 개방 * 피보험자,실업급여,고용안정,모성보호 등	▸ 고용보험 연구 및 민간의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

구분	분야명(기관)	개방 내용	기대 효과
18	**국가통계통합(KOSIS)정보,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335개 기관 883종의 통계와 61종의 통계 원천데이터를 개방 **(개방)** 국가승인통계 공표 후 미수록 통계 108종 및 마이크로데이터(통계 원천데이터) 30종 추가 개방	▸ 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자료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마이크로데이터 개방으로 주요정책 수립 등 민간 경제활동 뒷받침
19	**날씨예보자료** (기상청)	**(현황)** 지상관측, 해양부이 등 8종의 기상데이터 개방 중 * 대용량데이터로 업로드가 어려워 데이터 제공 신청 시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제공 **(개방)**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위성영상 등 6종 추가개방하고 오픈API로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무료화	▸ 대용량 기상데이터를 오픈API로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20	**국가재난정보, 생활안전지도** (국민안전처)	**(현황)** 일일재난 종합상황 정보, 생활안전정보, 사건정보 등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98종 개방 **(개방)** 생활안전지도(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 대규모공사장정보, 재난상황이력 등 국가재난관리정보 24종 추가 개방	▸ 전국단위 표준화된 재난정보 개방으로 재난·안전분야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중복투자 방지
21	**교육행정정보** (교육부)	**(현황)** 학생서비스, 학부모서비스 등 236종 개방 **(개방)** 학교알리미를 통해 국민관심도가 높은 대학진학률, 학교시설, 교원현황 등 9종 추가 개방 * NEIS는 정보주체간 협의를 거쳐 개방	▸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22 (통합)	**국가과학기술연구정보** (미래창조과학부)	**(현황)**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학술논문 7,200만 건 개방(NDSL) 및 논문검색 등을 위한 66종 통계 및 3종 오픈API 서비스 제공(NTIS) **(개방)** 국가R&D정보 LOD형태로 공개, 오픈API로 2종 추가 개방	▸ 국가R&D 정보를 활용한 민간 신규서비스 창출 및 민간R&D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과학기술 데이터에 대한 일반국민 접근성 향상
	산업기술정보 (산업기술진흥원)	**(현황)** 국가R&D 연구성과 기술요약정보, 기부·나눔기술정보 등 2종 개방 * 데이터 정제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필요 **(개방)** 연구성과 기술요약정보 전체자료 2종 추가 개방	▸ 가공된 기술요약정보를 공공硏·중개기관 활용시 업무효율성 증대 ▸ 연구성과물 기술요약정보를 검색시간 단축

- **(추진 현황)** 2016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에 따라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33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22개 분야 조기 개방) 및 42개 신규 데이터의 추가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개방된 데이터셋 수는 2013년 말 5,272건에서 2017년 1월 현재 21,555건으로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3개 분야 데이터 중 사회보장 정보는 2017년 중 장애인 지원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며, 국세와 판결문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2월, 2019년까지 개방을 추진할 38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IoT, 빅데이터 등 국민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지능형(인공지능 의료영상진단 정보), 융합형(공공조달 통합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등), 사회현안해결형 (해양환경생태 정보, 일자리 종합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 15개 분야의 개방을 추진한다.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 **(추진 배경)** 최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준의 표준화, 낮은 가독성 제고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

는 수준으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더불어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를 통한 활용성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공약 내용)** 지속적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수준을 평가하여 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강화를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민간 활용이 우수한 21개 DB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2016년 21개 DB에서 2017년 42개 DB로 평가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데이터에 대해 품질관리 수준평가가 이루어진다.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도 매년 양성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2016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오염DB(한국환경공단), 교통사고DB(경찰청) 등 21개의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완료하였다. 2017년에는 교육행정정보(교육부), 지방재정정보(행안부) 등 활용도 높은 42개 DB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기관단위 시범평가가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 수준평가 대상 선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품질관리 등급제도 도입을 위해 2016년 11월 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반영하였고, 2016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였다. 2017년의 경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기관별 자가진단과 컨설팅이 완료되었으며, 본평가를 거쳐 2017년 12월 평가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담당할 전문심사원 양성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21명, 2017년 24명 총 45명의

전문심사원 양성이 완료되었다.

- **(향후 계획)** 2017년 중 교육행정정보, 지방재정정보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2개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심사원 양성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해당 교육과정과 전문심사원 선발을 위한 시험을 실시한다.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 **(추진 배경)**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활용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애초부터 개방을 목적으로 생산된 공공데이터는 드물며 따라서 특정한 형식이나 특정 소프트웨어 등에 종속된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활용 증대를 위해서는 오픈포맷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공약 내용)** 공공데이터가 자유롭게 가공·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오픈포맷 형태 데이터 제공을 확대한다.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구동되는 기존의 데이터는 데이터 갱신시 오픈포맷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경우 개방도 3단계 이상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오픈포맷의 비중을 2015년 38.9%에서 2016년 60%, 2017년에는 70%로 확대한다.
- **(추진 현황)** PDF 파일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하도록 하는 등 PDF 파일데이터 정비와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환도구의 개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2017년 7월 현재 총 45,155건의 데이터 중 34,004건이 3단계 이상의 오픈포맷으로 개방됨에 따라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율이 75.3%에 도달하여 당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2017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도

높은 오픈포맷 비율을 인정받아,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 **(향후 계획)**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률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2-d. 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 **(추진 배경)**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보유·개방하고 있는 핵심 데이터의 경우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은 그동안 같은 종류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제공하는 항목, 형식이 제각각인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제정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는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등 총 43개 표준 데이터셋이 제정되었다.
- **(공약 내용)** 2016년 30개의 표준 데이터셋을 추가 제정하고 2017년까지 총 100종을 제정할 예정이다. 표준데이터 등록시 표준 준수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개발도 추진한다.
- **(추진 현황)** 다 기관 공통데이터 등 핵심데이터를 개방표준 분야로 선정·개방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서비스 실현을 위해 2017년 8월 현재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등 79개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 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도 개발 완료하였다.(gooddata.go.kr)
- **(향후 계획)** 2017년 말까지 총 100종의 목표 데이터 셋 중 표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21종에 대하여 표준을 신규로 제정한다. 그리고 신산업 데이터 개방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3 시민 참여

3-a. 국민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 **(추진 배경)** 국민디자인단은 2014년부터 디자인을 정책에 접목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민참여 모델이다.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하는 것이다.
- **(공약 내용)**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풀(pool)을 당초 1,300여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생활안전 등 분야별 디자인과제를 발굴·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참여를 내실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특화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추진 현황)** 2016년도에 중앙 44개, 지방 338개 등 총 382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디자인단 풀(pool)을 3,8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중앙부처의 경우 사회복지, 생활안전,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다양한 디자인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밀접형 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특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 결과 국민디자인단이 세계 3대 디자인 상의 하나인「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새로운 국민참여 모델로서 서비스디자인(정부/기관)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7년 8월 현재 중앙 39개, 지자체 234개 등 총 273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우수과제(49개)에 대해서는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서비스디자이너(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및 활용 방법론 제시)를 지원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제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단년도 과제와 다년도 과제로 이원화하고, 과제 추진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기관 간 협업과제를 도입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등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라는 관점이 반영되고, 국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안 도출로 행정의 투명성・효율성・신뢰도가 제고되며, 국민의 정책수용성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향후 계획)** 현재 진행 중인 273개의 국민디자인과제가 2017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17년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개최를 계기로 우수사례 발굴, 추진성과 공유 및 성과확산 등이 추진된다.

④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추진 배경)**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달성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환경이 PC에서 다양한 기기의 웹브라우저 이용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간 Active-X나 특정 브라우저 등 비표준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공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보편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비표준 기술의 제거,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호환성 확보 등의 노력을 확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표준 기술에 해당하는 Active-X를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는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웹 표준 기술로의 대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체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의 Active-X부터 우선 제거하여 2017년까지 Active-X-free율을 95% 수준까지 올리며, 국민 불편과 관련 없는 행정내부용 홈페이지의 Active-X는 점진적으로 제거를 추진한다.

- **(변경 사항)** 특히 이 공약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면서,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공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한다. 즉, Active-X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웹 표준 기술로 대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체기술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의 Active-X부터 우선 제거하여 2020년까지 대민 웹사이트의 Active-X를 모두 제거하고, 국민 불편 해소 등 간결하고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Active-X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관리대상 수치를 기존에 사이트 수에서 Active-X 수로 변경한다. 2015년 6월 기준 대민 웹사이트의 Active-X 숫자는 5,219개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6월 시점까지 제거된 Active-X는 2,216개, 잔존 Active-X는 3003개로 제거율은 42.4%였다.
- **(추진 현황)**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생활에 밀접한 웹사이트부터 Active-X를 사용하지 않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Active-X

제거 실적 등 이행 점검 추진 결과 2016년 12월 Active-X를 사용 중인 대민 홈페이지의 수는 1,296개, 잔존 Active-X의 수는 1,930개, 누적 제거 Active-X의 수는 3,289개로 조사되어 Active-X 제거율이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기준 대민 홈페이지 누적 제거 Active-X의 수는 4,152개로 제거율은 79.6%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연차적으로 Active-X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 수준진단 및 Active-X 등 비표준 기술 제거 관련 설명회 개최(2017.3.),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개정 (2017.4.), Active-X 제거를 위한 웹 표준 전문가 특별좌담회 개최(2017.5.),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정책 담당자 워크숍 실시(2017.8.)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 **(향후 계획)** Active-X 제거율을 2017년 말까지 87.3%, 2018년 92.9%, 2019년 96.8%, 그리고 2020년에는 100%까지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ctive-X 제거율을 연차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민이 자주 이용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공공분야 웹사이트의 Active-X 제거, Active-X 제거 실태조사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2016.12월 대민 홈페이지 잔존 Active-X수 (제거율)	제거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30 (63.0%)	1269 (87.3%)	291 (92.9%)	204 (96.8%)	166개 (100%)

※ ‘17년 상반기 Active-X 실태조사시 제거계획을 반영한 수치임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 **(추진 배경)** 그간 제공 부처 중심의 포털구축과 고유의 서비스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필요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대국민 온라인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서비스 플랫폼 마련이 요구되고 있었다. 2015년 이루어진 행정서비스 대국민 설문조사(2015.9.2~9.15, 1,500명 대상) 결과에서도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안내・신청・처리 결과까지 조회하는 서비스에 대해 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88%)고 희망하는 등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약 내용)** 종래 복지, 고용, 중소기업지원 등 각 서비스 영역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2016년에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수혜자맞춤형서비스의 통합을 추진하며, 2017년 이후 복지로·워크넷 등 타 부처 포털과의 연계를 실시한다.
- **(추진 현황)** 2017년 7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민원24(민원발급), 대한민국정부포털(정책정보), 알려드림e(수혜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대국민 통합플랫폼인 정부24를 구축 완료하였다. 정부24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하며, 소득확인증명(홈택스), 건강보험자격, 국민연금자격변동 등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을 시범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향후 계획)** 기관별로 제공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고, 민원사무의 온라인·모바일 확대를 추진한다. 그리고 2019년

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의 282종 행정서비스를 연차적으로 연계한다.

※ ('17) 타기관 85종, ('18) 타기관 85종, ('19) 타기관 90종 행정서비스 연계확대

4-c.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

- **(추진 배경)** 그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으로 다양한 정부서비스가 온라인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기관·사이트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용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수단을 통한 정부서비스 제공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 **(공약 내용)**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2016년 중 대국민 서비스 알리미 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정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인별 관심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입력하면 수혜 가능한 정부서비스 정보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추진 현황)**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널로 서비스 알리미 앱을 구축하여 2016년 8월부터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비스 알리미는 서비스 안내, 국민 소통 등 4가지 분야로 서비스 화면(UI)이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맞춤 혜택 서비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위한 부분도 마련되어 있다. 2017년 8월까지 월 평균 24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앱 다운로드 수는 82만여 건에 달했다.
- **(변경 사항)** 2017년 7월 민원24(민원발급), 대한민국정부포털(정책정보), 알려드림e(수혜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해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가 구축되었으며, 관련 앱 또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앱의 서비스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서 이 공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5 반부패 및 공직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 **(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 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청렴도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부패방지법」 제정(2002년, 이후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및 평가의 법령상 근거 마련

(동 법률 제27조의2) 등을 계기로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공약 내용)**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추진 현황)** 2016년 총 2,441개 부패취약업무에 대해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에 대한 설문 실시를 실사하였고 733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측정하였다. 이때 청렴도 조사 설문지에 "공무원(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16. 9월)하였고,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 후 각 공공기관에 그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 **(향후 계획)** 청렴도 측정 워크숍(2017.3.28., 3.30., 3.31.) 실시, 담당자·전문가 의견 수렴(4~5월) 등 측정대상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실시계획을 2017년 6월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기관별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항 및 외부부패 사례 내부응답 설문에 부정청탁 간접경험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⑥ 재정투명성 제고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 **(추진 배경)** 2015년 9월 개최된 'UN개발정상회의'를 계기로 ODA 사업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자발적 협의체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에 2015년 12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IATI는 ODA 관련 공통의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이 ODA 지원 실적, 향후 지원계획, 국별지원전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공개항목은 39개(기관명, 사업명, 사업설명, 사업 진행상황, 사업 참여기관, 수원국, 사업예산 등)이며, 이 가운데 13개 항목을 필수공개 항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회원은 IATI 정보 공개 양식에 맞춰 자체 웹사이트 및 IATI 웹사이트를 통해 13개 항목에 대한 원조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공약 내용)**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에 따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 약 740건에 대한 정보를 IATI 요구양식에 맞게 변환하여 공개한다. 우선 기관명, 사업식별자, 사업명, 사업설명 및 현황, 참여기관, 수원지역·분야 등 13개 필수 항목의 공개를 2016년 중 실시하고 향후 ODA 정보 공개 범위 및 참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추진 현황)** ODA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2016년 8월 KOIC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약 740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IATI가

선정한 39개 공개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개하였다. 2차로 2017년 4월 KOICA와 EDCF 외 주요 정부부처(기재부, 외교부, 복지부)의 ODA 사업정보 및 프로젝트 이외의 기술협력 및 지식공유 사업 정보도 공개하였으며, 공개항목도 13개에서 18개로 확대하였다.

- **(향후 계획)** 향후 현행 13개 필수항목에서 20여 개로 공개 사업정보 항목을 확대하고, 정보공개 참여기관도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 **(추진 배경)** 개발원조사업의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사업결과의 효과성 제고 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 관련 정보는 정책 자료나 활용도가 낮은 통계 중심으로 제공되는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과정의 정보공개 확대, 현장점검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수원국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공약 내용)** 현재 ODA 시행부처 및 기관별 자금 형태·원조유형·분야·지역별 지원현황 등 총 지원현황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는 ODA 통계정보를 개선하여, ODA 통계 시스템 개편을 통해 ODA로 지원된 개별 사업의 목적이나 설명, 사업실시 기간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추진 현황)** 2017년 4월 ODA통합관리시스템(stats.odakorea.go.kr) 개편을 완료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상세 정보 입력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별사업의 개요·분야·상세사업 내용·

사업기간·지출현황 등을 입력할 수 있고 각 사업별 예산정보 및 사업진행 단계 입력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사업관리 활용도도 높였다. 개별 사업정보 공개범위를 OECD 보고 기준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사업명, 금액(총·순지출, 약정액)에서 사업설명, 지원조건, 금액(증여등가액, 잔액), 정책마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통합관리시스템의 조회화면을 시각화하여 사업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5월에는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新ODA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 **(향후 계획)** 新 ODA통합관리시스템의 본격 운영을 계기로 2016년 확정통계 및 2017년 잠정통계 세부내용을 2018년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VI 결론 및 향후 계획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제시된 공약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개별 공약별로 당초 계획 대비 상당한 수준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 14개 공약 중 다른 공약으로 통합된 1개를 제외하고, 4개는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9개도 상당한 수준 완료되었다는 자체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개방 초기인 2013년 말의 5,272건에서 2017년 7월 말 기준 23,055건으로 4.3배가 증가하였고, 민간의 데이터 활용 건수는 2013년 13,923건에서 2,914,805건으로 209.3배가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개방 지수'(OUR Data Index: 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에서 1.00만점에 0.94을 받아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함은 물론 영국, 미국 등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제3차 국가실행계획 이행 기간 동안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2017년 OGP 운영위원회 선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위원국으로 선출되었는바, 앞으로 OGP가 제시하고 있는 가치와 원칙, 절차 등을 존중하고 국가실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OGP 참여와 공동창조의 기준」은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참여와 공동창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7년 8월 대한민국 OGP 포럼을 출범시켰으며 OGP 포럼이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 제시된 공약 이행의 전 과정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둘째, 열린 정부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변혁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공약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적극 발굴할 것이다. 지난 3차례의 국가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공약 사항들을 제시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혁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공약의 제시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에 열린 정부의 가치 실현에 모범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공약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공공데이터 등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공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OGP 회원국들과의 동료 학습 및 사례 공유 등이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참고 공약별 상세 현황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7. 12. 31.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 정영근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정보공개 서비스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2006년부터 도입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확산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온라인 수수료 납부, 다양한 파일 뷰어를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 정보목록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직 남아있어 국민들의 공공정보의 접근이나 이용 상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공약 내용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범위를 행정·공공기관에 이어 293개 사립(전문)대학교(사립대 156개, 전문대 137개)까지 확대 시행하고, 사립 대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교육도 실시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정보공개시스템의 확산을 통해 이용자들의 공공정보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o (정보 접근성)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교육하여 국민들의 정보공개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o (시민 참여) 시민사회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사립대학교정보공개 개방, 오남용 처리방법 등의 원고작성 및 참여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였다. o (책임성) 사립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정보공개의 중요성, 정보공개 처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류 및 동료학습	o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Legislative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간부 대상 정보공개법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2017.6.14., 서울힐튼)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개(정보공개 범위, 공개주체 및 자격, 공개절차, 분쟁해결 및 업무시 애로사항 등			
추가 정보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훈련비 : ₩2,155,800원 → '대학정보공개 이제시작이다' 원고료 : ₩120,000원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o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범위 확대 협의 및 시스템 사용 협조 - 학교별 신청서 접수 완료 및 승인처리(2016.8.31.) - 기관별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시험운영 및 테스트(2016.9.) - 사립대학교,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 확대 실시(2016.10.) o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실시 - 일시/장소 : 2016.9.20., 14:00~17:00 /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 참석대상 : 사립 및 전문대학교 정보공개 대상자 215명 - 교육목적 : 정보공개 제도 및 시스템 교육, 정보공개 요령 사례 공유 등 업무 역량 강화 o 사립대학교 온라인 정보교육서비스 관련 자문 - 건 명 : '대학정보공개 이제 시작이다'의 내용으로 정보공개 필요성 등 - 자문위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o "사립대학교 궁금한 정보,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언론보(2016.11.30.~12.1.)			
향후 계획	o 정보공개포털 사용자(일반국민, 공무원) 요구 사항을 반영한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개선 o 정보공개법·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 o 정보공개시스템의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o 사립대학 대상 통합정보공개시스템 확산 및 정보공개포털과의 연계	o 2016. 7. 1.	o 2017. 12. 31.	상당수준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정영근
담당 부서(과)/ 직책		정보공개정책과
이메일/전화번호		jyk0907@korea.kr / 02-2100-3426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기획재정부, 병무청 등 47개 기관, 경기도,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약 385개 공공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부문 중에서는 아래 관련자를 인터뷰한다면 이 공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02-2039-8361 -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 02-743-6750,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th></tr>
<tr><td colspan="5">1-b. 국민 체감형 원문정보 지속적 발굴·제공</td></tr>
<tr><td colspan="5">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 정영근 사무관</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td><td colspan="4">정보공개법 전면 개정, 세계 최초의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도입,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등을 통해 정보공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교육, 복지, 여성보육, 환경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취합·선정·공유하며, 원문정보공개에 관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전파하고 홍보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발굴·제공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o (정보 접근성) 매년 상·하반기 '우수 원문정보 10선'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원문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2017. 6. 26 언론보도)
o (시민 참여) 전문가 그룹에 선정한 30건의 우수 원문정보를 국민투료를 통해 최종 10선을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을 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를 유도하였다.
o (책임성)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정보공개위원회(2016.12.13., 2017.7.13.) 및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2017.3.3., 2017.6.21)를 개최하였다.</td></tr>
<tr><td>교류 및 동료학습</td><td colspan="4">1-a.와 동일</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기타 정보를 기재하시오.
→ 정보공개발전을 위한 정보공개위원회(31·32·33차) 회의 경비 : ₩5,411,600원
→ 정보공개법 발전을 위한 20년 기념 토론회(2회) : ₩6,210,600원</td></tr>
<tr><td rowspan="2">이행수준</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o 원문공개 6개월간 운영 상황 언론보도(2016.9.20.)</td></tr>
</table>

	o 2016년 상반기 원문정보 우수사례 선정 계획 및 결과 - 2016년 상반기 원문공개 우수사례 조사(11.14.~25.) - 대국민 선호도 투표 실시(12.14.~21.), 우수사례 10선 선정 ※ 2016년 상반기 원문정보 우수사례 선정 홈페이지 공개 o 2017년 상반기 원문정보 우수사례 선정 계획 및 결과 - 2017년 상반기 원문공개 우수사례 조사(5.30.~6.21.) - 대국민 선호도 투표 실시(7.7.~20.), 우수사례 10선 선정 ※ 2017년 상반기 원문정보 우수사례 선정 언론보도(7.26) 및 홈페이지 공개
향후 계획	o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우수 원문정보 10선 선정 발표 및 홍보 o 정보공개 법·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개선 o 정보공개시스템의 보안·개인정보보호 등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o 국민체감형 원문정보 조사·선정	o 2016. 7. 1.	o 2018. 6. 30.	상당 수준 완료
o Best Practice 사례 전파 및 홍보	o 2016. 7. ~	o 2018. 6. 30.	상당 수준 완료
o 대국민 홍보 켐페인 실시	o 2016. 12. ~	o 2018. 6. 30.	상당 수준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정영근
담당 부서(과)/ 직책		정보공개정책과
이메일/전화번호		jyk0907@korea.kr / 2100-3426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1-a와 동일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1.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				
1-c.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이용 활성화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 고준석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사전공개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함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 이행률이 미흡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 12월 기준으로 이행률이 49.6%에 불과하였다.			
공약 내용	공공기관이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활용하도록 권고하여 이행률을 연차적으로 향상시킨다. 특히, 2015년 말 기준으로 49.6%에 머물러 있는 기조자치단체의 이행률을 2016년까지 55%로 개선시킨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이 정책 실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해야 할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표준모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 표준모델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여 사전정보공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은 보다 표준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o (정보 접근성)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전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o (시민 참여) 공공기관이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할 때 시민들은 양질의 공공정보를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정부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정부 감시와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기반이 된다. o (책임성) 공공기관이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적극 공개할 때, 국민은 정부의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책임성 있게 행동하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			
교류 및 동료학습	1-a.와 동일			
추가 정보	2013년에는 사전정보공표 건수가 5만4천건에 불과하였으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전파와 점검 및 평가를 통해 2016년 말에는 186천여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o 사전정보공표 운영실태 점검·컨설팅(2016. 9. 외교부 등 5개 중앙부처, 대전시 등 11개 지자체,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공기관) o 사전정보공표 실태 상하반기 점검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개선조치 완료 (25개 기관) o 사전정보공표 우수사례 10선 선정 (2017년 1월) o 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실태점검 및 컨설팅(2017년 11월)			
향후 계획	앞으로 사전공개하는 정보의 양을 계속 확대하면서 정보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도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활용	2016. 7. 1.	2017. 12. 31.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고준석
담당 부서(과)/ 직책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jskoh7@korea.kr / 02-2100-3424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1-a와 동일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2. 공공데이터 개방</th></tr>
<tr><td colspan="5">2-a.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td></tr>
<tr><td colspan="5">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송희라 사무관</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td><td colspan="4">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해 36개 분야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일부 분야의 경우 민간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계로 조기 개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o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을 지속 추진하여, 2016년까지 식의약품종합정보 등 22개 분야의 개방을, 국세, 사회보장, 판결문 등 3개 분야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
o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학진학률, 식품방사능수치, 특허-상품 연계정보, 지식재산권정보 등 42개 데이터에 대한 추가 개방 노력도 진행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국민 수요를 반영한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정부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o (정보 접근성) 22개 분야 데이터를 2016년에 조기 개방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o (시민 참여) 2015년 9월~10월 실시된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민간수요가 많은 22개 분야 데이터를 선정하여 조기 개방하였다.
o (기술과 혁신) 공공데이터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조기 개방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였다.</td></tr>
<tr><td>교류 및 동료학습</td><td colspan="4">o 2016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 Pacific Open Data Summit 2016에서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소개
o 201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OGD Expert Group Meeting 참여
o 201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UN International Knowledge-sharing Workshop on Open Government Data(OGD)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UN 및 전세계 공공데이터 개방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소개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관련 협력 방안 논의</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o 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4~2016)과 연계
o 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7~2019)과 연계</td></tr>
<tr><td rowspan="2">이행수준</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구체적 활동내용	o 민간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정보 등 22개 분야 데이터 2016년에 조기 개방 <완료> - 부동산거래관리(국토부), 지방재정(행안부), 국가법령(법제처), 식의약 종합정보(식약처), 도로명주소(행안부), 노동보험(근로복지공단), 기상정보(기상청), 국가공간정보(국토부), 국민의료정보(심평원), 도시계획정보(국토부), 수출입무역통계(관세청), 해양공간정보(국립해양조사원), 재난관리정보(행안부), 산업재산권(특허청), 국가통계통합정보(통계청), 교육행정정보(교육부), 음식물쓰레기정보(한국환경공단), 고용보험정보(한국고용정보원),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국민연금정보(국민연금공단), 산업기술정보(산업기술진흥원), 사회보장정보(사회보장정보원)
향후 계획	o 민간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 및 개방 - 지능형, 융합형, 사회현안해결형 국가중점데이터 15개 분야 개방 추진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22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조기개방	2016.7.1	2016.12.31.	완료
국세정보 및 사회보장정보 개방 추진	2016.7.1..	2018.6.30	제한적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apaella@korea.kr /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특히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부문 중에서는 아래 관련자를 인터뷰한다면 이 공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jp@opennet.or.kr) - 샘포스트 이승희 대표 (seanlee@sampost.co.kr) - 빈닷컴 정철우 대표 (p3water@gmail.com)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2. 공공데이터 개방</th></tr>
<tr><td colspan="5">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td></tr>
<tr><td colspan="5">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송희라 사무관</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td><td colspan="4">공공데이터 개방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 및 품질 낮은 데이터 개방은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o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2016년 21개, 2017년 42개, 그리고 2018년은 주요 핵심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데이터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영역별·프로세스별 평가항목(36개)을 구성하여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하며, 개선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o 이와 함께, 품질관리 등급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품질관리 등급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평가 추진체계 운영절차, 시정조치 절차 등 세부 시행 지침·가이드를 마련한다.
o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을 양성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민간이 신규서비스 개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o (정보 접근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o (시민 참여)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도모한다.
o (기술과 혁신) 품질관리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의 시정조치를 점검하며, 개선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td></tr>
<tr><td>교류 및 동료학습</td><td colspan="4">2-a와 동일</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2-a와 동일</td></tr>
<tr><td rowspan="2">이행수준</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o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평가
- 2016년 21개 대용량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완료>
. 대기오염DB(한국환경공단), 교통사고DB(경찰청) 등 21개</td></tr>
</table>

	- 2017년 42개 대용량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대상 선정<완료> . 교육행정정보(교육부), 지방재정정보(행안부) 등 42개 o 품질관리 등급제도의 도입을 추진 - 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반영(2016.11)<완료> - 2016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완료> - 2017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기관별 자가진단 시행<완료> o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을 양성 - 2016년 양성결과 : 교육수료(29인), 시험합격(21인) <완료> - 2017년 양성결과 : 교육수료(58인), 시험합격(24인) <완료> * 2017.8월 현재 총 45명의 전문심사원 양성완료
향후 계획	o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 평가 실시 (교육행정정보, 지방재정정보 등 42개) o 품질관리 등급제도의 도입추진 - 2017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 컨설팅 (7~8월), 본 평가(9월~11월), 결과 확정·공표(12월) - 2018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o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 선발·교육을 통한 전문심사원 양성 - 2018년 : 전문심사원 양성 과정 운영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2016. 7. 1.	2018. 6. 30.	상당수준 완료
추진체계 정비 및 심사원 양성	2016. 7. 1.	2018. 6. 30.	상당수준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apaella@korea.kr /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2-a와 동일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2. 공공데이터 개방</th></tr>
<tr><td colspan="5">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td></tr>
<tr><td colspan="5">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송희라 사무관</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td><td colspan="4">소프트웨어(흔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픈포맷 방식으로 데이터 개방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2015년 말 기준으로 오픈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률이 38.9% 수준에 그치고 있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2015년 기준 38.9%였던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률을 2017년에 70%까지 확대하는 등 전체 개방 데이터 중 오픈포맷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등록할 때 기존 가공이 불가(PDF)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흔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을 유도하며, 신규 개방데이터는 오픈포맷으로 등록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환도구도 개발하여 제공하며, 기관별 개방데이터 제공 포맷 현황을 측정.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오픈포맷 개방을 유도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오픈포맷 개방률 확대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o (정보 접근성) 기존 가공이 불가(PDF)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흔글, 엑셀)에서만 구동되는 데이터는 오픈포맷 전환 등록을 유도하여 오픈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을 도모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확대한다.
o (시민 참여) 본 공약은 국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이슈를 반영한 것이다.
o (기술과 혁신)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환도구를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도모한다.</td></tr>
<tr><td>교류 및 동료학습</td><td colspan="4">2-a와 동일</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2-a와 동일</td></tr>
<tr><td rowspan="2">이행수준</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o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률 : 2017년에 70%까지 확대 <완료>
- 75.3% 달성(2017.7월 말 현재)
. 34,004(오픈포맷 데이터(3단계 이상)) / 45,155(총 데이터) = 75.3%
o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전환 등록 <완료></td></tr>
</table>

	- PDF 파일데이터 정비 (2016년) - 2016년 PDF 파일데이터 정비후 PDF 파일은 원칙적으로 등록 불가 - 공공데이터포털 내 오픈포맷(XLS→CSV) 자동 전환도구 개발제공 (2016년 하반기)
향후 계획	o 오픈포맷 데이터 개방률 : 지속적으로 오픈포맷 비율 증진 o 공공데이터 오픈포맷 전환 유도 :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도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등록심사 강화	2016. 7. 1.	2018. 6. 30.	완료
자동전환 도구 개발	2016. 7. 1.	2018. 6. 30.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apaella@korea.kr /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2-a와 동일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2. 공공데이터 개방</th></tr>
<tr><td colspan="5">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td></tr>
<tr><td colspan="5">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7. 12. 31.</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송희라 사무관</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td><td colspan="4">기관별로 개방한 데이터가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항목과 형식이 제 각각으로 제공되어 활용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정제·가공 해야 하는 등 활용을 제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2016년 30개의 표준 데이터셋을 추가 제정하고 2017년까지 총 100종을 제정할 예정이다. 표준데이터 등록시 표준 준수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개발도 추진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o 여러 기관이 보유한 공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 데이터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100개의 개방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o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를 개발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o (정보접근성) 각 지역 기관 단위로 생성되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준을 통일하여 개방함으로써 전국 단위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o (시민 참여) 공공데이터 표준은 공공·민간 의견조회(약3개월) 및 행정예고(약1개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고시하였다.
o (기술과 혁신) 공공데이터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자동화 도구 개발·적용을 통해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이행의 효율화를 도모한다.</td></tr>
<tr><td>교류 및 동료학습</td><td colspan="4">2-a와 동일</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2-a와 동일</td></tr>
<tr><td rowspan="2">이행수준</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o 2017년 말까지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100개 대상 후보 선정
-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등 79개 표준제정(2017.8월 현재)
o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 도구개발(2016년, gooddata.go.kr)</td></tr>
<tr><td>향후 계획</td><td colspan="4">o 2017년 말까지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100개 제정</td></tr>
</table>

	- 개방표준 후보목록으로 발굴된 44개 데이터를 토대로 21개 이상 표준을 2017년 말까지 제정 . 지진대피소 등 44개 기 발굴 o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 개발 - 개발된 도구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개방표준 제정 (100개 누적)	2016. 7. 1.	2017. 12. 31.	상당 수준 완료
표준데이터 자가진단 자동화 도구 개발 적용	2016. 7. 1.	2017. 12. 31.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직책		공공데이터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apaella@korea.kr /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2-a와 동일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3. 시민 참여	
3-a.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국민참여정책과 문광섭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o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 정책제안.공청회.정책토론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은 많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적극적 발언을 하는 일부 국민이나 단체, 소수 전문가의 입장만 반영하게 된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o 또한 기존의 국민 참여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드러내지 않은 숨은 욕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약 내용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풀(Pool)을 당초 1,300여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생활안전 등 분야별 디자인과제를 발굴.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참여를 내실화하고 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특화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개요> o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 모형인 '국민디자인단'을 2014년 도입・추진하였다. o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정책과정 전반에서 국민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공공서비스·정책의 질 향상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정책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징> o 수요자가 문제를 겪으며 느낀 경험과 감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 진정으로 필요(needs)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디자인 등을 개발하는 서비스디자인 관점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특히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디자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상향식 접근(bottom-up)을 강화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이해를 심화시킨다. o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의 도출 및 확산을 통해 정책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품질을 제고한다. <추진 과정> o 정책기획·결정·집행단계별 서비스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수요자(일반국민,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 사업담당 공무원으로 과제별 국민디자인단을 구성(8~15명)한다. o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국민을 중심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디자인적 사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발견하기-정의하기-발전하기-전달하기'라는 4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며, 국민 수요를 관찰.분석해서 정책 개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table>
<tr><td></td><td>1. 발견하기(1단계) : 관찰조사, 체험조사, 심층인터뷰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책수요자의 잠재적인 욕구를 발견하는 단계
2. 정의하기(2단계) : 조사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요자의 욕구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방향 및 목표를 결정하는 단계
3. 발전하기(3단계) : 아이디어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단계
4. 전달하기(4단계) : 서비스 프로토타입 등을 통하여 국민디자인단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점검하는 단계
o 국민디자인단 활동 종료 후, 수행한 과제 결과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주요 사례>
o (정보공개 개선 사례) 환율.날씨.세관 등 해외여행 정보 및 해외직구 정보 등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공공데이터를 국민디자인단의 논의를 통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관세청)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o (노동·복지환경 개선 사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개선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노후 산업단지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버스를 움직이는 탁아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인천시)하여 아동복지와 노동생산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o (시민 참여) 정책과정 전반에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설계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정책 발굴, 개선사항 도출로 정책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및 정책완성도를 제고한다.</td></tr>
<tr><td>교류 및 동료학습</td><td></td></tr>
<tr><td>추가 정보</td><td>o 예산투입 현황 : ('15) 5.2억원 → ('16)5.2억원 → ('17)6.6억원
o 국정과제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세부 실천과제</td></tr>
<tr><td>이행수준</td><td><table><tr><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o 우수과제 발굴 및 성과 창출 강화를 통해 국민디자인단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기반 환경 조성
- '공공서비스디자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 국민디자인단 이해도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례로 배우는 국민디자인단 매뉴얼' 제작(국민디자인단의 운영 단계별로 목표, 주요활동, 구성원별 역할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직관적으로 설명)
- 국민디자인단 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구축·운영
o 디자인단 운영 단계별 맞춤형 교육·워크숍 실시
- (과제발굴) 사업담당자, 서비스디자이너 대상으로 과제 발굴방법 및 디자인단 구성원별 역할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워크숍 실시
- (과제운영)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49개) 서비스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과제 운영절차 안내 및 서비스디자인 심화교육 실시
- (역량강화)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성과 공유 등 성과창출 방안, 장애요인 대응방안, 과제별 추진전략 도출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o 국민디자인단 과제유형 다양화
- '17.7월 현재, 총 273개(중앙 39, 지자체 234) 신규과제 발굴 및 디자이너 지원과제 선정 추진</td></tr>
</table>

	* 273개 과제 중 예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및 특교세 대폭 확대(2016년 5억원 → 2017년 10억원)를 통한 성과별 차등 교부(양적성장→질적성장으로 전환) * 2016년 과제발굴 현황 : 총 382개(중앙 44, 지자체 338) 과제 - 과제추진 시기를 고려, 단년도 과제와 다년도 과제로 이원화 - 과세 추진에 따른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기관 간 협업과제 도입 * 중앙 간, 중앙.지방 간, 지방 간 과제에 민간기관도 참여 - 과제와 관련된 스토리 발굴·실행 및 스토리 공유·확산 등을 수행하는 스토리두어 구성·운영 o 2016년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시상 추진 - 국민디자인단 유공기관 및 유공(대상)자 포상, 우수사례 공유(전시 및 발표) - (포상규모) 대상 : 대통령상(2), 최우수상 : 국무총리상(4), 우수상 :행정자치부 장관상(60) - (부상금) 포상 훈격에 따라 차등 지원 - 주요 우수사례 ・국민안심 해외직구 정보통합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모델 개발 ・민간협업으로 버섯6차 산업화 및 농가소득 향상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Let 美 in 산단-노동자가 웃는 아름다운 공장 ・플레이버후드 국민디자인단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숲 만들기 ・내일(My Job)을 설계하는 두근두근 Tomorrow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민간기록물 탐사대 운영 ・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여행브랜드화 프로그램
향후 계획	o 2017년 국민디자인과제(273개) 발굴 추진(중앙 39, 지자체 234) o 2017년 국민디자인과제 성과공유대회 개최 - 우수사례 발굴, 추진성과 공유 및 성과확산 추진 o 2018년 국민디자인단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국민 중심의 일하는 방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착기반 강화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2016년 국민디자인과제(382개) 추진	2016. 5. 1.	2016. 11. 30.	완료
2016년 성과공유대회 개최	2016. 12. 2.	2016. 12. 2.	완료
국민디자인단 풀 확대	2016. 7. 1.	2018. 6. 30.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문광섭
담당 부서(과)/ 직책		국민참여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mksb71@korea.kr/ 02-2100-346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일반국민, 서비스 디자이너,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는 아래 관련자를 인터뷰한다면 이 공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윤성원 PD, 010-3123-3623
기타 정보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정보자원정책과 김영훈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중 상당부분이 Active-X라는 비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사용을 강제하고, 편중과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시켜 지속적으로 불편을 초래하였다. 향후 Active-X 이용은 점차 축소시키고 웹 표준(HTML5)으로 전환하여 Active-X가 초래한 보안상 취약점과 불편을 제거하고자 한다.
공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보편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비표준 기술의 제거,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호환성 확보 등의 노력을 확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비표준 기술에 해당하는 Active-X를 대체 가능한 기술이 있는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웹 표준 기술로의 대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체 기술의 안전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의 Active-X부터 우선 제거하여 2017년까지 Active-X-free율을 95% 수준까지 올리며, 국민 불편과 관련 없는 행정내부용 홈페이지의 Active-X는 점진적으로 제거를 추진한다. 이상 2016년 10월 제3차 국가실행계획 제출 당시의 공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Active-X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웹 표준 기술로 대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체기술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의 Active-X부터 우선 제거하여 2020년까지 대민 웹사이트의 Active-X를 모두 제거하고, 국민 불편 해소 등 간결하고 편리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Active-X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관리대상 수치를 기존에 사이트 수에서 Active-X 수로 변경한다. 2015년 6월 기준 대민 웹사이트의 Active-X 숫자는 5,219개로 집계되었으며, 2016년 6월 시점까지 제거된 Active-X는 2,216개, 잔존 Active-X는 3003개로 제거율은 42.4%였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향후 Active-X 이용은 점차 축소시키고 웹 표준(HTML5)으로 전환하여 Active-X가 초래한 보안상 취약점과 국민 불편을 제거하고자 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o (기술과 혁신)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층 간결하고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table>
<tr><td></td><td>국민의 공공정보 접근 및 정책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td></tr>
<tr><td>교류 및 동료학습</td><td></td></tr>
<tr><td>추가 정보</td><td>이 공약은 2017.7월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사이트 기준으로 Active-X를 관리하던 것을 Active-X 수 기준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 국정과제(8-5 열린혁신정부,서비스하는 행정, 20년까지 Active-X 제거)
<table><tr><th>구분</th><th>2016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r><tr><td>기존
(사이트 기준)</td><td>1,638개 제거
Active-X Free 달성률 88%</td><td>844개 제거
Active-X Free 달성률 95%</td><td>-</td><td>-</td><td>-</td></tr><tr><td>변경
(Active-X 수 기준)</td><td>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 63%</td><td>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87.3%</td><td>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92.9%</td><td>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96.8%</td><td>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율 100%</td></tr></table></td></tr>
<tr><td>이행수준</td><td><table><tr><th>미착수</th><th>제한적</th><th>상당 수준 완료</th><th>완료</th></tr><tr><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o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Active-X 제거 실적 등 이행 점검 추진
- 행정.공공기관(12,013개사이트, (대민5,219개 Active-X)) Active-X 제거 이행실적 점검 및 대체기술 개발현황 등 안내
- 2016.12월 기준 Active-X를 사용 중인 대민 홈페이지의 수는 1,296개, Active-X의 수는 1,930개임
o「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개정(2016.6월)
- 비표준 기술 제거(제6조) 신설, 웹 호환성 수준진단 시 '비표준 기술 사용 여부'를 포함하여 점검
o 2016년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웹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2016.10-12)
- 450여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호환성/접근성 진단 및 결과 통보
o 웹사이트 수준진단 및 Active-X 등 비표준 기술 제거 관련 설명회 개최 (2017.3)
-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자를 대상으로 웹 표준 정책 및 대체 기술 현황 등 설명, 비표준 기술제거 및 표준준수 촉구
o「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개정 (2017.4월)
- 비표준 기술(Active-X등)의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내용, 구축시 웹표준 준수 등 포함한 개정 추진
o Active-X 제거를 위한 웹 표준 전문가 특별좌담회 개최(2017.5월)
- 행정·공공부문 Active-X 등 비표준 기술 제거 및 웹표준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역할 및 방향 논의(전자신문 5.29일자 기획보도)
o 2017년 상반기 행정·공공기관 Active-X 제거 실적 조사(8.3.~21.)
- Active-X를 사용하고 있는 2,071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제거실적 조사
o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정책 담당자 워크숍 실시(8.28.)
- 웹사이트 호환성 개선을 위한 대체기술 안내, 호환성 수준진단 등 설명</td></tr>
</table>

<table>
<tr><td>향후 계획</td><td>o 모바일 웹호환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호환성 지침개정(2017.6월~12월)
- 행정·공공기관의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18년 모바일 웹 수준진단실시
o 2017년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웹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2017.9월~12월)
- 450여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호환성/접근성 진단 및 결과 통보
o 주요 행정·공공분야 Active-X 제거 추진
-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생활에 밀접한 웹사이트부터 Active-X를 사용하지 않도록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table>
<tr><td rowspan="2">2016.12월 대민 홈페이지 잔존 Active-X수 (제거율)</td><td colspan="4">제거계획</td></tr>
<tr><td>2017년</td><td>2018년</td><td>2019년</td><td>2020년</td></tr>
<tr><td>1,930
(63.0%)</td><td>1269
(87.3%)</td><td>291
(92.9%)</td><td>204
(96.8%)</td><td>166개
(100%)</td></tr>
</table>
※ 2017년 상반기 Active-X 실태조사시 제거계획을 반영한 수치임</td></tr>
<tr><td>이행과제 현황</td><td>시작일</td><td>종료일</td><td>이행수준</td></tr>
<tr><td>대민 홈페이지 Active-X 제거</td><td>2016. 7. 1.</td><td>2018. 6. 30.</td><td>상당 수준 완료</td></tr>
<tr><td colspan="4">연락처</td></tr>
<tr><td colspan="2">주관부처</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 colspan="2">담당자</td><td colspan="2">김영훈</td></tr>
<tr><td colspan="2">담당 부서(과)/ 직책</td><td colspan="2">정보자원정책과/사무관</td></tr>
<tr><td colspan="2">이메일/전화번호</td><td colspan="2">devigel@korea.kr / 02-2100-3966</td></tr>
<tr><td rowspan="2">관련자</td><td>정부부처/부서</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td></tr>
<tr><td colspan="2">기타 정보</td><td colspan="2"></td></tr>
</table>

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4-b. 대국민 서비스포털 통합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행정안전부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조신희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14천여 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7만여 건의 서비스를 각각의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어 국민이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다.			
공약 내용	2016년에 민원24, 정부대표포털, 수혜자맞춤형서비스의 통합을 추진하며 2017년 이후 복지로·워크넷 등 타 부처 포털과의 연계를 실시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7만여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선별하여 연계를 통한 대국민 온라인 대표창구 일원화를 추진한다. 특히 대표홈페이지 구축하고 행정서비스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주요 행정서비스를 선별하고 연계 제공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o (정보 접근성)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에 기여한다. o (기술과 혁신) 시스템 통합 및 연계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추가 정보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o 행정안전부내 3개 시스템 통합('17.3 정부포털 + 민원24 + 알려드림e) o 통합 행정서비스 "정부24" 개통('17.7) o 타 기관 22종 서비스 연계			
향후 계획	ㅇ19년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 282종 행정서비스 선별적 연계 - ('17) 타 기관 85종 행정서비스 연계 확대 - ('18) 타 기관 85종 행정서비스 연계 확대 - ('19) 타 기관 90종 행정서비스 연계 확대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행정정보서비스 통합포털 구축	2016. 7. 1.	2017. 7. 26.	완료
부문별 서비스 포털과의 통합·연계	2016. 7. 1.	2018. 6. 30.	상당 수준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조신희
담당 부서(과)/ 직책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seenee@korea.kr / 02-2100-4185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table>
<tr><th colspan="5">4. 기술과 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th></tr>
<tr><td colspan="5">4-c.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개발·제공</td></tr>
<tr><td colspan="5">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8. 6. 30.</td></tr>
<tr><td>주관부처/담당자</td><td colspan="4">행정안전부 / 혁신기획과 이효순 사무관</td></tr>
<tr><td colspan="5">공약 내용</td></tr>
<tr><td>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td><td colspan="4">그간 다양한 정부서비스가 마련되었으나, 국민이 이를 다 알 수 없고 기관·사이트별로 분산되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게 되었다.</td></tr>
<tr><td>공약 내용</td><td colspan="4">중앙부처·공공기관 등 기관별 핵심 정부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국민이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2016년 중 대국민 서비스 알리미 앱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정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개인별 관심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입력하면 수혜 가능한 정부서비스 정보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td></tr>
<tr><td>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td><td colspan="4">'정부 서비스 알리미'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후 국민이용 건수, 모바일 이용환경 개선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핵심서비스만 소개.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td></tr>
<tr><td>OGP 가치와의 관련성</td><td colspan="4">o (투명성 증진) 대국민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 서비스의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한다.</td></tr>
<tr><td>교류 및 동료학습</td><td colspan="4"></td></tr>
<tr><td>추가 정보</td><td colspan="4">2017년 7월 민원24(민원발급), 대한민국정부포털(정책정보), 알려드림e(수혜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해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가 구축되었으며, 관련 앱 또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앱의 서비스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제3차 국가실행계획에서 이 공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td></tr>
<tr><td rowspan="2">이행수준</td><td>미착수</td><td>제한적</td><td>상당 수준 완료</td><td>완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o 정부3.0 홈페이지를 반응형 웹으로 구축, 앱(하이브리드 앱)형태로 구현
o 자신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나만의 맞춤혜택 서비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코너 마련</td></tr>
</table>

	o 웹 방문자수 : 월 평균 24만명, 앱 다운로드 수 : 82만여 건 o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가, 식품, 주거, 안전'부터 세금·가계소비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서비스 매월 추천 o 앱은 정부24로 통합 o 웹사이트 내에 OGP 웹 페이지 신설
향후 계획	이 공약은 4-b로 통합되었다.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대국민서비스 알리미 제공	2016. 8. 19.	-	(4-b로 통합)

연락처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자		이효순
담당 부서(과)/ 직책		혁신기획과 / 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leehs30@korea.kr / 02-2100-3418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5. 반부패 및 공직 윤리				
5-a.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강화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3. 3. ~ 2018. 6. 30.				
주관부처/담당자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조사평가과 원현심 사무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 취약분야를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부정청탁 근절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차단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청렴성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약 내용	o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o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부정청탁법 제정·시행,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평가근거 마련 등에 따라 공공기관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 및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 노력을 유도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o (정보접근성) 청렴도 조사결과를 권익위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o (시민 참여) 청렴도 측정의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을 참여하도록 한다. o (책임성) 청렴도 설문 내용에 업무담당자의 책임성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 2017. 4. 18.부터 4. 26.까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요르단, 몰도바 등 반부패기구 소속 직원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 등 부패방지 교육 실시 ※ 2007년 이후 청렴도 측정제도의 해외 전수 실시(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부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개국)			
추가 정보	- 공약예산: 2,176백만원('16년), 2,091백만원('17년)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 2016. 8월부터 청렴도 조사 설문지에 부정청탁 인식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진행			

	※ 설문 내용: 공무원(직원)들이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패방지권익위법령에 포함(2016.9월)하였고,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 후 각 공공기관에 그 결과의 공개 요청
향후 계획	-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 경험 문항을 반영하여 조사 진행(~2017.11월) ※ 부정청탁 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문항 및 외부부패 사례 내부응답 설문에 부정청탁 간접경험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진행 예정 - 청렴도 조사 결과 인터넷 공개(2017. 12월)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청렴도 조사에 부정청탁 반영	2016. 7월	2017. 12월	상당 수준 완료
청렴도 측정 결과 인터넷 공개	2016. 3월	2018. 4월	상당 수준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원현심
담당 부서(과)/ 직책		청렴조사평가과/사무관
이메일/전화번호		whs12@korea.kr/044-200-7632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각급 공공기관 유관단체 ※ 기관별 청렴도 측정시 평가자로 참여
기타 정보		

6. 재정투명성 제고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7. 1. ~ 2017. 11. 30.				
주관부처/담당자	국무조정실 / 개발협력정책관실 맹준호 서기관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2015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 국제기구,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여 원조사업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하였는바, IATI 기준에 따른 ODA 정보 공개가 필요하게 되었다.			
공약 내용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프로젝트 사업 약 740건에 대한 정보를 IATI 요구양식에 맞게 변환하여 공개한다. 우선 기관명, 사업식별자, 사업명, 사업설명 및 현황, 참여기관, 수원지역·분야 등 13개 필수 항목의 공개를 2016년 중 실시하고 향후 ODA 정보 공개 범위 및 참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IATI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정보 공개를 통해 ODA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ODA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이 가능해지며, 수원국의 예측가능성 담보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o (정보 접근성) 동 공약을 통해 ODA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정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공개가 활성화된다. o (시민 참여) 정부의 정책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접근가능하게 됨으로써 시민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추가 정보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구체적 활동내용	o (1차) KOICA와 EDCF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약 740개의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IATI가 선정한 39개 공개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2016.8월) o (2차) KOICA와 EDCF 외 주요 정부부처(기재부, 외교부, 복지부)의 ODA 사업정보 및 프로젝트 이외의 기술협력 및 지식공유 사업 정보도 공개하였으며, 공개항목도 13개에서 18개로 확대 (2017.4월)
향후 계획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개하는 사업항목과 원조정보 공개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이행과제 현황	시작일	종료일	이행수준
IATI 지정 필수 항목 공개	2016.7월	2017.11월	완료
공개대상 사업 및 항목 확대	2016.10월	2018.6월	상당 수준 완료

연락처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담당자		맹준호
담당 부서(과)/ 직책		대외협력과 / 서기관
이메일/전화번호		maeng@korea.kr / 044-200-2153
관련자	정부부처/부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외교부 개발협력국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조정실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기타 정보		

6. 재정투명성 제고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공약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 2016. 12. ~ 2017. 4.				
주관부처/담당자	국무조정실 / 개발협력정책관실 김설희 전문위원			
공약 내용				
이 공약이 다루고자 하는 공공문제	개발원조사업의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사업결과의 효과성 제고 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 관련 정보는 정책 자료나 활용도가 낮은 통계 중심으로 제공되는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공약 내용	현재 ODA 시행부처 및 기관별 자금형태.원조유형.분야.지역별 지원현황 등 총 지원현황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는 ODA 통계정보를 ODA 통계 시스템 개편을 통해 ODA로 지원된 개별 사업의 목적이나 설명, 사업실시 기간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ODA 통계모니터링시스템(www.stats.odakorea.go.kr)을 개편하여 ODA 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ODA 재정의 투명성을 개선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o (정보 접근성) ODA 통계시스템을 개편하여 사업의 상세정보 및 분야별, 국가별, 기관별, 개별 사업별 집행결과 등 다양한 통계가 공개됨으로써 ODA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 o (시민 참여)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보기 쉽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대국민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추출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추가 정보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상당 수준 완료	완료
				○

<table>
<tr><td colspan="2">구체적 활동내용</td><td colspan="4">. ODA 통합관리시스템 개편 완료(2017.4월 新시스템 공개)
. 시행기관 대상 新ODA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2017.5월) 개최</td></tr>
<tr><td colspan="2">향후 계획</td><td colspan="4">ODA 사업정보의 충실한 입력을 통해 더욱 정확한 ODA 통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시스템을 통한 ODA의 정보의 지속적 공개 추진</td></tr>
<tr><td colspan="3">이행과제 현황</td><td>시작일</td><td>종료일</td><td>이행수준</td></tr>
<tr><td colspan="3">ODA 통계시스템 개편</td><td>2016. 12월</td><td>2017. 4월</td><td>완료</td></tr>
<tr><td colspan="6">연락처</td></tr>
<tr><td colspan="2">주관부처</td><td colspan="4">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td></tr>
<tr><td colspan="2">담당자</td><td colspan="4">김설희</td></tr>
<tr><td colspan="2">담당 부서(과)/ 직책</td><td colspan="4">개발협력지원과/전문위원</td></tr>
<tr><td colspan="2">이메일/전화번호</td><td colspan="4">kims53@korea.kr/044-200-2159</td></tr>
<tr><td rowspan="2">관련자</td><td>정부부처/부서</td><td colspan="4" rowspan="2">외교부 / 개발협력국,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협력국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작업반(WP-STAT)</td></tr>
<tr><td>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td></tr>
<tr><td colspan="2">기타 정보</td><td colspan="4"></td></tr>
</table>

참고 중간자체평가보고서(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과 답변

연번	관련 공약	의견 제출자	내용	답변
1	1-a.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추진 현황)의 수치(2017년 8월말 현재 전체 사립(전문)대학교의 98%에 해당하는 287개 대학이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와 비교할 수 있도록 (추진 배경)에 조사 당시 현황 정보 추가 제안 ▶ 예) 추진당시 전체 사립(전문)대학교의 00%에 해당하는 000개 대학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함.	- 제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당시 정보공개시스템에 연계된 사립대학의 수는 3개교로, 전체 293개 대학 중 1%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3차 국가실행계획 중간자체평가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2	2-a.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완료	사단법인 코드	- 중점데이터를 선정하고 집중하여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취지는 무척 좋음 - 중점 데이터 선정 과정에 시민이나 민간 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만의 의견으로 중점 데이터를 선정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 보임 - 향후 계획에서도 국민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지능형, 융합형, 사회현안해결형 국가중점데이터 15개 분야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 수요가 어떤 과정으로 반영되었는지가 궁금함. - 중점 데이터를 선정하여 좀 더 집중하여 발굴하고 개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임	- 제1차 국가중점데이터의 경우 민관합동 TF (공공 데이터 전략위, 민간기업, 열려라데이터 활동단)를 구성하여 기관별 DB 현황 및 개방계획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후보를 선정한 후 현장실사, 온라인평가 등을 거쳐 최종 제1차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제2차 국가중점데이터의 경우 기존에 추진했던 국민중심의 수요조사 이외에도 해외사례분석, 신기술 분석 등 새로운 방법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 해당 중점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다 수준 높은 데이터의 개방이 실현되면 좋을 듯 함. (다부처 협력, 관련 데이터 연계 등)	
3	2-b.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추진 완료	사단법인 코드	-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있어 사용자중심의 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준의 표준화, 낮은 가독성 등의 문제 해결은 무척 중요함. - 또한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도 무척 중요함. - 다만 사용자 중심, 낮은 가독성, 데이터 상호연계 등에 대한 기준과 목표를 정부가 판단하지 말고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민간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내에 데이터 표준화, 최신성(업데이트), 정확성(오류율), 연계성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심사원들이 직접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2-c. 가공·활용이 자유로운 오픈포맷 확대	사단법인 코드	- 오픈포맷으로의 전환과 확대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추진현황에 보면 PDF 파일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하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수요에 맞게 오픈 포맷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 따라서, 기존에 데이터 공개를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 포맷이 아닌 데이터도 우선은 공개를 하고 향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오픈 포맷으로 전환 및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같이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아직 왜 오픈 포맷이 아닌지도 설명이 되면 더욱 친절할 것임 - 어떤 데이터가 검색 해봐도	-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제공 기관에 대해 수정 및 재사용이 어려운 가공데이터(pdf)가 아닌 원천데이터(rawdata) 형태로 개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오픈포맷이 아닌 데이터(hwp, xls 등)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오픈포맷 변환 툴, 기관 자체 품질개선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오픈포맷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기관별 시행계획 등을 통

			안 나오는 것 보다는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공개될 것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 국민의 수요는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것 보다는 언제쯤 개방될 것인지, 아직은 정제되지 않았는지, 어떤 포맷으로 제공되는지 등도 포함되며, 그래도 데이터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됨. - 지속적인 오픈 포맷으로의 전환은 적극 추천함.	해 데이터명, 제공시기, 제공방식 등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계획을 공개하고 있으며,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제공신청창구와 데이터 1번가를 통해 신청 및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2-d. 개방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	사단법인 코드	- 위의 내용과 많은 부분 중복되어 그런 내용은 작성하지 않았음. - 표준 제·개정 및 적용 확산을 위한 대상 데이터 선정에 민간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	- 개방표준 제정 대상 발굴 시 민간기업, 관련 협회, 시민 대상 수요조사(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개방표준별 세부 기준(개방항목 및 항목별 상세정보) 또한 민간 전문가, 기업,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등 민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6	2. 관련 총평	사단법인 코드	전체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산을 위해 많은 준비와 실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이나 민간 기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반영이 투명하게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데이터가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등을 포함하는	- 다양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대국민 수요조사, 활용기업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수립한 제2

			공공데이터의 목록화와 공개된 데이터 간의 상호연계를 통한 연관 데이터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17-2019),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 등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의 경우 연관 데이터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7	3-a.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정의연대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국민디자인단을 모집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선정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고 누가 참여했는지, 국민디자인단 선정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 평가서에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국민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국민디자인단 추진방식이 확산·정착되도록 추진방향 제시(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운영가이드), 교육,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 등 역할 수행 중입니다. ※ 국민디자인단구성기준 (예시) - 선정된 과제와 관련한 생활상의 경험이 있는자 - 관련 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자 - 성별, 연령,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8	3-a.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정의연대	국민디자인단 집행과정에서 중간 피드백은 하였는지 했다면 누가 어떤 방식,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간평가를 했는지 평가에	- 국민디자인단 집행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기관 자율사항입니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만, 국민디자인단 공모과제 중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지원하는 과제는 집행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9	3-a.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정의연대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중앙과 지자체의 평가를 구분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이 향후 지속성이 있는지 아닌지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가 기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한 국민디자인단의 자체평가와 중앙사업단의 객관적 평가가 함께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최종 결과 평가 관련하여 피드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10	3-a.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정의연대	국민디자인단 사업이 중앙과 지자체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던데, 중앙과 지자체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 국민디자인단 사업 구분기준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11	3-a.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정의연대	2016년에 비해 2017년 국민디자인단 사업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2017년 국민디자인단 사업수는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이며, 연말에 최종 집계 완료 예정입니다.
12	3-a.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정의연대	2017년 국민디자인단 중앙 39개, 지자체 234개 사업을 잘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 목록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한지요?	-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전체 사업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govservicedesign/633
13	4-a.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오픈넷	전자정부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Active-X 기술 제거에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함 그러나 Active-X 기술 제거 자체가 목표가 되어 단순히 Active-X가 .EXE 프로그램 설치방식으로 대체되는 것 역시 공약 달성으로 평가된 것은 한계점으로 지	- 액티브X는 우선적으로 표준기술(HTML5)을 적용하여 제거하되, 민원발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서명, 매체제어 등의 표준기술이 없는 기능은 EXE로 대체하여 국민 불편을

			적될 수 있음. .EXE 프로그램 등 어떠한 추가 설치 없이 순수 웹표준기술만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삼아야 함. 또한 위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 방법의 다양화(웹표준방식 준수)를 차기 공약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으로는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서"만 본인확인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에 따라 정부가 전자서명을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에 사전 개입하는 현행 전자서명법을 개정해야 함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표준기술(HTML5)이 개발되면 실행파일도 단계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불필요하게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사례를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등 본인확인 수단으로 과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이용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QR코드, SMS/ARS, 이메일, 생체인증 등 간편 인증체계를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14	5. 반부패 공직윤리	한국 투명성기구	보고서 중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패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로 변경할 필요 있음.	- 지적하신 부분의 보고서 해당 내용을 보면, '2002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실제로 청렴도 조사가 개시된 2002년

				당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43이었으나, 2003년 7.71, 2004년 8.46, 2005년 8.68, 2006년 8.77, 2007년 8.89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렴도 조사결과를 두고 볼 때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8년 이후 청렴도는 일관된 상승 또는 하락 경향이 보이지 않으며, 2008년 이래 '내부청렴도' 항목이 추가되었고, 2012년에 정책고객평가 및 감점제도가 추가되는 등 모형 자체가 변경되어, 2007년 이전의 청렴도 수치와 단순비교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적하신 부분은 결국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의 중간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바, 지적하신 문구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패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로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2002년 이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33&stts_cd=103301&clas_div=&idx_sys_cd=
15	5. 반부패 공직윤리	한국 투명성기구	- (정보접근성) : 정보 공개의 내용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시민 참여) : 청렴도 조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참여는 단순히 조사에 응하는 수준일 뿐 시민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책임성) : 청렴도 조사에 업무담당자의 책임성을 측정하는 것이 OGP 가치에서 말하는 책임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적하신 부분은 공약이 OGP 가치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공약 담당자가 자체 평가한 결과로서, 조금이라도 가치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고 그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치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OGP의 IRM 보고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6	5. 반부패 공직윤리	한국 투명성기구	1) NAP에 대한 OGP의 평가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접근성, 시민 참여, 책임성, 기술과 혁신에서 파악할 때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OGP의 다른 평가 기준에는 대체로 미흡하다고 판단됨. 2) 특히, 이 사업은 국민권익위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라는	- OGP에서 회원국의 국가실행계획을 평가할 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잠재적 효과(potential transformative effect)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국가실행계획에 포함된 일부 공약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OGP 정신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따라서 이 공약은 민주주의 심화, 열린 정부 지향 등의 OGP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그리 크지 않음.	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17	5. 반부패 공직윤리	정의연대	반부패 공직윤리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대체로 기관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도 필요하지만 반부패 공직윤리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리를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신고할 경우 그로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비리를 저질러도 그에 따른 처벌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비리를 해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큰 것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그 내용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 신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신고자 책임감면 확대,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등입니다.
18	5. 반부패 공직윤리	정의연대	국정감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활동에 한국 OGP포럼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 대한민국 OGP 포럼은 우리나라의 OGP 활동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부과 시민사회가 공동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포럼입니다. 제안하신 활동은 포

				럼 내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19	5. 반부패 공직윤리	정의연대	현재 반부패 공직비리 감시 등의 활동이 주로 정보통신이나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 오프라인으로 광화문 신문고(상징적인 북 설치)를 개설하여 정책의견도 듣고 반부패 의견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 운영은 정의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되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형식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정부는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 광화문 1번가-국민인수위원회의 경우 오프라인 제안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창구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	6-a. 국제원조 정보 공개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 IATI 정보공개 관련**, 항목은 확대(13개→18개, 5개항목추가) 되었으나 공개 기관 확대 실적은 저조함. ▶ IRM의 권고사항 중 하나는 '더욱 진취적이고 측정 가능한 공약 수립'임. 이러한 권고사항에 따라, 연간 공개 기관 확대 계획을 **측정 가능한 목표**로 **진취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함.	- 2017년 말 참여기관 10개 이상, 공개항목 2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1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 통계시스템 개편관련, **정확도 점검** 및 **보완** 제안 - ODA코리아 지원현황 데이터와 ODA통계시스템의 데이터 불일치 항목 점검 필요 - KOICA와 EDCF 홈페이지 데이터와 ODA통계 시스템 데이터 불일치 점검 필요 - DAC통계와도 불일치-DAC통계와의 불일치 규모가 큰 바, 관련 설명 필요	- ODA코리아 홈페이지와 통계시스템의 데이터 재검토 결과 대체로 일치하나, 과거 데이터가 수정되지 못한 것이 일부 있어, 전반적 재검토 후 수정할 예정입니다. - 지원현황 중 분야의 경우 ODA코리아

				홈페이지 이용자 특성상 통계시스템보다 일반 대중이 더 자주 접하므로 이해하기 쉽게 주요 분야 위주로 공개하고 있으며, 대·중·소 분류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진 통계시스템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그룹이나 지원형태도 이러한 의미로 항목의 차이는 있으나 항목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22	6-b. 대국민 ODA 통계정보 접근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보완** 제안 - 통계에 약정액과 지출액이 섞여있는데 약정액으로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 필요 - 양자원조만 해당되는 경우, 명확히 표시 필요. 설명이 없을 경우, 총 ODA로 오해할 수 있음	- ODA 통계시스템에서는 약정액과 지출액뿐만 아니라 DAC 보고방식 변경 예정에 따른 증여등가액, 총지출, 순지출 데이터가 구분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ODA 통계수치는 순지출액 기준으로 제공되나 DAC에 보고 및 공개하는 기준이 약정액인 경우 ODA 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약정액으로 공개하였습니다. - 다자원조는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국제기구

				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분야, 소득그룹, 지역 등을 특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분야별, 지역별, 대륙별 지원현황은 모두 양자를 의미합니다.
23	6. 관련 총평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	- 6번 재정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IATI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정보 공개 및 ODA 통계모니터링시스템 개편을 통한 ODA 재정의 투명성 증진 도모 노력은 고무적임. - 그러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는 바, 데이터 점검을 통한 정보 일치 또는 불일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일반 대중이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친절한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증진 도모 노력이 필요함.	- 재검토를 통해 불일치하는 통계 수치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복잡한 통계 데이터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